

95. 10. 27 '여성인력 첨단과학기술분야 진출활성화 방안' 심포지움

여성과학인 양성 전담기관 절실

여성 개편 · 개입 프로그램 필요 지적

과거 어느때보다 국가 차원의 여성인력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책 결정기구에서의 직접참여를 위한 의원 할당제에서부터 공공 부문 여성고용할당제까지 논의의 폭은 확대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 최근에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정무장관실(제2)이 개최한 '여성인력 과학기술분야 활용 정책토론회'는 우리사회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자리였다. 김명자(숙명여대 화학·과학사)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4개월간 진행한 연구다.

기초과학계열의 여성 학사 인력은 9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94년에는 1.7배 증가한 9천5백16명이었다. 박사인력 중 여성비는 91년 0.19%, 92년 0.14%, 93년 0.13%, 94년 0.1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공분야별 여성비는 94년의 경우 생물 58%, 수학 54%, 지구과학 54% 등이었고 물리학 계열에서 가장 적은(학사 29%, 박사 7%) 수준이었다.

공학계열은 특히 여성의 진출이 저조해 94년 학사가

7%, 박사가 2% 수준이었다. 특히 재료, 항공, 전자, 토목 등은 5% 미만이었다. 따라서 자연계 여성인력은 공학계열은 드물고 기초과학계열이나 농수산해양계열에 편중돼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 정부출연연, 여성공학 교수 3%

연구비 수혜는 2~7%

비정규직 많고 고학력일수록 여성비 낮아

중심으로 살펴본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교수 가운데 여성은 14%. 전공분야별 여성비는 농수산, 기초의학 및 약학이 10%를 간신히 넘었고, 생물과학(9.6) 화학(6.2) 수학(5.6) 등의 순이었다. 공학계를 포함, 나머지 분야는 3% 미만의 저조한 수준이었다.

대학에서의 연구비 지급과제 배분현황 조사결과 90년 이후 특정기초연구에서는 여성 교수인력이 2-7%, 핵심전문연구에서는 3-6% 수준의 수혜실적을 보였다. 또 전문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한국해양학회의 경우 93년 9월 현재 5백40명 회원 중 여성은 10명이었다.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활동

하고 있는 여성인력은 직위가 높고 정규직일수록 여성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처 산하 22개 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책임급과 선임급 연구직 여성비는 각 전체의 2.0%(1천2백99명 중 27명)와 3.1%(1천32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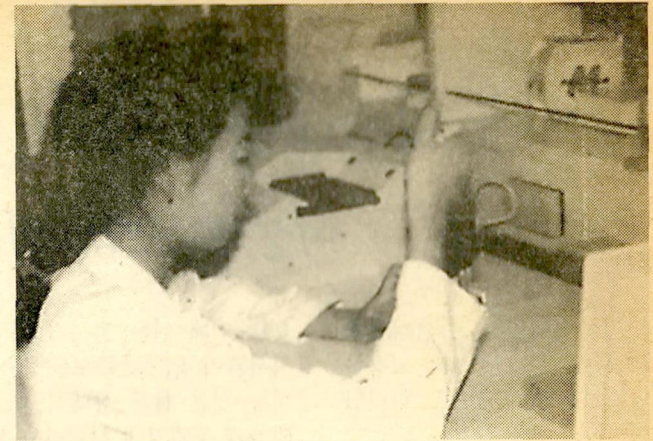
66명), 연구원급은 전체의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연구소 가운데 여성 인력이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곳은 8곳. 이중 5곳이 단 1명의 여성책임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분야별 여성의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생명과학이나 화학분야에 많은 여성인력이 진출해 있어 여성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에 바탕해 전공선택과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연구소내 여성인력은 지위가 안정되지 못한 채 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연구원급에서는 여성인력의 30.5%나 됐다.

학위별 분포에서는 박사급 2.9%, 석사급 6.1%, 학사급

14.0% 등으로 고급인력일수록 여성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전문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가 적다는 것,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들조차 전문직으로 진출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 또한 여성이자 전문인으로서의 이중삼중고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공분야별 인력분포 현황에서도 생명과학(9.5%)을 제외한 정보전자통신(3.7%), 기계설비(1.4%), 에너지자원 원자력(0.9%) 등의 분야는 역시 여성의 참여가 극히 낮았다.

연구보고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문제의 핵심은 배출인력



이 남성인력에 비해 적다는 것 보다도 양산되는 학사인력이 자질, 제도, 관행 등에 의해 사장된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력공급측면에서 여자대학 등 여성고등교육체계의 보완, 전문대의 교육개혁, 여자상업고의 개편, 96년 정부인력양성계획 시행시 할당제 채택, 재교육·훈련방식 등 여성교육에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수요측면에서는 개입프로그램으로 쿼터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여성

인력 개발의 전략수립과 실천을 맡고, 여성과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변화에 대한 장단기적 전망과 취업정보 제공, 역할모델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제시, 여성과학자에 대한 연구비지급 주선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에 따른 개인 및 민간부담의 비용을 공제해 주는 현실적인 정책대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정미 기자)